

투데이 칼럼

국방부까지 나선 이란 발언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UAE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해 9일 만에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가 "윤 대통령께서 아크부대장병들이 UAE가 직면한 안보 현실을 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한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동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온 외교부에 국방부도 늦게나마 힘을 보탤데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방부가 나서야 할 정도로 UAE와의 관계는 우리 군에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월남전 이후에도 우리 군은 해외 곳곳에 파병을 해왔다. 대부분 내전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곳들이었다.

1993년 소말리아에 파견된 상륙수부대, 1995년 앙골라 공병부대, 1999년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2002년 아프간 다산·동외부대, 2003년 이라크 서희·제마부대, 2004년 이라크 지이툰·다이만 부대, 2010년 아이티 단비부대, 아프간 우쿠노부대 등이었다.

현재 우리 군이 해외 주둔 중인 곳들도 상황은 대부분 비슷하다.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활동 중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가 있다. 해적들로부터 한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도 있다. 그리고 UAE '아크부대'가 있다. 지역 내 안보 환경의 안정을 추구하는 다른 부대들과 달리 아크부대는 그 목적이 두 나라의 협력 및 우호 증진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아크부대는 2010년 UAE 왕세제가 UAE 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세부 협력 방안 등 발전적 교류 확대를 요청해 만들어졌다. 합동참모본부도 "아크부대는 기존의 유엔평화유지군 및 다국적군 파병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국방 교류협력력을 위한 파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 UAE는 평소 '군사 외교'에서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보다 앞서 UAE를 공식 방문했다. 한국 육군참모총장으로는 처음으로 UAE 지상군사령부를 찾았다고

화화 훈련장과 우리가 수출한 '천무' 운용 부대를 둘러봤다. 이보다 며칠 앞선 12월 초 정상화 공군참모총장도 UAE를 찾아 군사 외교를 펼쳤다. UAE 공군사령관 등을 만나 양국 공군의 교류·협력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아크부대도 방문했다. 정 총장은 특히 우리가 UAE에 수출한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천궁'의 실사격 훈련도 직접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지난해 9월 UAE에서 열린 다국적 방공·미사일 방어 훈련 '팰런 실드(Falcon Shield)'에 처음 참여하기도 했다. UAE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생산하는 고동훈련기 T-50,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소형무장헬기(LAH) 등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UAE가 중동 방산 수출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

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 기간 중 2건의 방산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우리 방위사업청과 UAE 국방부 산하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전략적 방위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두 나라는 워킹그룹 구성과 기술 정보 교환, 기술 이전 등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우리 측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다목적 수송기 국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아크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발언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실명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북한도 대외 선전매체를 동원해 "초보적인 외교 상식도, 의례도 모르고 망발일하여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까지도 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란을 UAE의 적으로 표현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란과의 관계를 발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만 큼, UAE와의 관계를 최소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우리 정부에게 중요한 과제다.



정복규  
논설위원

기고문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월27일 본격 시행

경찰기관 협력단체 중 "자율방범대"가 전국 각 지역에서 구성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구성 운영에 있어 통일된 규정이 없었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이하 자율방범대법) 2022년 4월26일 공포되었고 올해 4월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새롭게 제정 시행될 자율방범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 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조)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으로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법 제5조제1항) 관할 경찰서장은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이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법 제5조제2항) 자율방범대원의 위·해측은 각 경찰서장이 맡게 되며 신분증명서의 경우에도 그 양식을 통일 방법활동



송태석  
원주경찰서  
심리과출소장

시 소지 의무가 있고 각종 교육, 지도감독의 경우에도 시, 도 경찰청에서 주관 시행토록 하였고 금지의무 조항도 신설 하였는데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금하도록 하였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비롯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에 가 훼손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으로 명문화 하였다.(법 제15조)

또한 공무원 의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항목으로 공무원 비밀누설, 수뢰죄, 뇌물공여죄, 수뢰후 부정처사죄, 알선수뢰죄 위반 시(이상 형법 제127조, 같은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등 벌칙이 적용된다.(법 제17조)

또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 징수토록 하였다.(법 제19조)

원주지역을 포함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작을 시행될 통일된 법률내용에 대한 사전 충분한 숙지에서부터 주민들의 자발적 마음이 담긴 자율방범대와 함께 치안 협력 공동체 운영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경찰기관과 치안 현장에서의 아름다운 동행이 자율방범대법을 통한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사설

지자체마다 출산지원금 도입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시군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간합을 쏟고 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궁금하다.

지난해 군산시 인구는 모두 20만 2467명이다. 10년 전보다 무려 1만5800여명이 줄었다. 2019년에 1300명대였던 출생아 수도 지난해 1천1백 명대로 특 떨어졌다.

위기감을 느낀 군산시는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지난해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올렸다. 타 시군에 비해서 현재 군산시 지원금 수준이 좀 낮은 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북 14개 시, 군 모두 출산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고,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해보다 한 명이 라도 늘어난 지역은 단 4곳에 불과하다.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반드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

는 뜻이다. 경쟁적인 현금 지원은 자치단체마다 서로 인구를 뺏고 뺏기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 전체 인구 증가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단편적인 출산지원금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이 때문에 양육 과정에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주거 환경 등에 종합적인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산에서 보육, 교육, 의료, 주거라고 하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사회가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는 시대다. 올해 전북 14개 시, 군이 마련한 출산지원금 예산은 모두 140억원이다.

그러나 현금성 예산 지원이라는 단순한 출산 촉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속적인 출산율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진지한 고민이 절실하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때이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문제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의 난방비 부담 증가에 야당은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고, 여당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도 지난 정부 '포플러즘'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추위 취약계층'에 직간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직접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금의 2배인 30만 4천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노인 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가 대상이다.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액을 두 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9천 원에서 3만 6천 원인 할인 폭이, 올 겨울에 한해 1만 8천 원에서 7만 2천 원으

로 확대된다. 국제 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급등했다. 그런데도 지난 몇 년 대응이 늦었다.

추가 인상 여부는 국민 부담과 한전, 가스공사 등의 재무구조 등을 살펴 정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플러즘의 폭탄을 서민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예비비 등의 전용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 서민 난방비 부담을 줄이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난방비 폭탄'이라는 표현으로 요금 인상이 이미 예상됐는데도 정부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영업이익에 이른바 '황제세'를 물려, 이 재원으로 7조 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외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난방비 지원 문제는 적정한 시점이 중요하다.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